지역화폐법 두고 "소비진작 효과 의문" vs "적극적 재정정책"

〈與〉 〈野〉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野 "온누리상품권 등과 다르지 않아 검증한 뒤 효과 없으면 안 하면 돼"

與 "尹 '맞춤형 지원'이 더 적절 일회성 지급, 소비증대 효과 안 커" 최상목, 가계부채 증가 질의 반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가운데 다수 의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과,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섰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조2522억원의 국비로 20조2000억원 규모, 2022년에 7050억원의 국비로 18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예산이 대폭 줄어 2024년엔 2998억원 국비로 8조80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다.

현재 지역화폐법은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위원회 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본회의에 지역화폐법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며 "발행되면 4개월 안에 안쓰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으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다. 효과가 좋으면 하고, 검증한 뒤 효과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수'가 확산이 안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방법론에 대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민생지원 차원에서 효과가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은 생계보조가 필요하니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실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재기를 지원하는지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월세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분들이 필요한 생계보조, 월세 지원, 바우처, 장학금, 일자리 정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항상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진작 효과를 본다"고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언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고,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증가를 거듭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응수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회의장〉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석 이후 처리 與野 협의 요청

野, 지역화폐법 등 본회의 부의했으나 우 의장 "의료대란 해소 먼저"에 무산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오는 19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과 함께 이들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우 의장의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법안은 여야의 쟁점 법안이라며 당장 국민에 불안을 야기하는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불러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국민들에 조금이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심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안조위에선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고, 공청회는 요청 자체가 없어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담긴 제3자 추천 방식, 야당의 비토권, 공소 취소권에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세 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로 부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상정해 추석 명절 전에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 의장이 국회의 쟁점 법안인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여야 협의를 먼저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이에 따른 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